

새 해

새해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

내가 새로워져서 인사를 하면
이웃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

새로운 내가 되어 거리를 가면
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

지난날의 쓰라림과 괴로움은
오늘의 괴로움과 쓰라림이 아니요
내일도 기쁨과 슬픔이 수놓겠지만
그것은 생활의 율조(律調)일 따름이다.

흰눈같이 맑아진 내 의식(意識)은
이성(理性)의 햇발을 받아 번쩍이고
내 심호흡(深呼吸)한 가슴엔 사랑이
뜨거운 새 피로 용솟음친다.

꿈은 나의 충직(忠直)과 일치(一致)하여
나의 즐기찬 노동(勞動)은 고독을 쫓고
하늘을 우리러 소박한 믿음을 가져
기도(祈禱)는 나의 일과의 처음과 끝이다.

이제 새로운 내가
서슴없이 맞는 새해
나의 생애, 최고의 성실로써
꽃피울 새해여!

언론  사람

1월호 주요 내용

- | | | |
|----|-----------|-------------------|
| 02 | 인터뷰 | 부구옥 영산대학교 총장 |
| 06 | 기고 | 포털 Q&A에 언론중재위원회가? |
| 07 | 백승찬의 영화세상 | 아바타 |
| 09 | 고충처리인 탐방 |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 |

“생산적 관계 회복이 조정 목표”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 청주지법, 인천지법, 서울지법 부장판사 역임
- 영산대학교 총장(현)
- 한국조정학회 회장(현)
- 언론중재위원회 총복중재부장
(1998. 4. ~ 9.)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은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조인 출신으로 2001년부터 교육계에 투신해 후진을 양성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총복중재부장을 지내기도 한 부 총장은 지난해 9월 출범한 한국조정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어 주목을 받았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부 총장을 만나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에 대한 소신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 한국조정학회 회장으로 선임되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회 회장을 제의받고 처음에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알다시피 법조인 출신이고, 대학교 총장은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이지만 학문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수락했고, 이제 학문연구에도 깊이 간여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큼니다.

■ 조정학회가 추구하는 이념은 어떤 것이며, 성공적인 조정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조정 은 소송을 통하지 않는 대체적 분쟁해결의 대표적 제도로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조정학회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단순히 분쟁을 종식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종전의 생산적인 관계로의 복원까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합의를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분쟁 당사자들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것까지가 조정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사회 전체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조정학회는 우선 성공적인 조정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법 전문가뿐 아니라 경제 경영을 포함한 행정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이 분들이 같이 호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윈윈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들은 행정의 영역을 배우고, 행정 전문가들은 법률 영역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게 되고, 최근에는 국내외 대체적 분쟁해결(ADR) 기구들간의 연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정학회와 중재위원회의 협력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생각입니다. 재판에 의지하지 않는 분쟁해결이라는 목표를 같이 추구하고 있으므로 서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력관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정과 중재는 인접영역이지만 구조가 조금 다른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 언론중재위원으로 재임하신 적도 있는데, 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

떠난 지가 오래 돼서(웃음)…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공적인 조정 중재사례에 대해 국민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언론기관도 스스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중재위 조정 중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총장님께서서는 법조인으로 출발해 2001년부터 교육계에 몸담고 계십니다. 법원과 학교에서 느끼는 보람이 각각 다를 것 같은데요?

판사는 항상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좀 수동적인 면이 있다면, 학교는 훨씬 능동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 큰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아직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필요로 합니다. 도전과 창의적 발상, 혁신 등 경영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러한 개념들이 대학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오근 팀장 사진/ 여운규 차장(이상 홍보팀)



이런얘기 저런얘기

떡국은 흰쌀로 만든 가래떡을 동전 크기로 썰어 육수에 넣어 끓여 먹는 우리 고유의 음식이다. 예로부터 설날에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 것으로 알려졌기에, 일명 첨세병(添歲餅)이라 불린다.

설날에 떡국을 먹게 된 연유에는 몇 가지 설들이 있다. 육당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에서 ‘설날은 천지 만물이 새로 시작되는 날인만큼 엄숙하고 청결해야 한다는 뜻에서 깨끗한 흰 떡국을 끓여 먹었다’고 했다. 기다란 가래떡이 장수를 상징하므로 한 살을 더 먹는 설날에 만들어 먹는다는 설도 일리가 있으며, 떡국에 들어가는 떡이 동전 모양임을 보고 재물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역별로 떡국을 끓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주로 쇠고기 국물에 떡국을 끓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역에 따라 닭고기(전라도)나 굴(통영을 비롯한 남해안)을 쓰기도 한다. 냉면과 마찬가지로 꿩고기를 쓰는 것이 정석이라는 얘기도 있다. 쌀농사를 많이 짓지 않는 강원도나 함경도에선 떡국대신 만둣국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개성 음식인 조랭이 떡국은 누에처럼 생긴 떡 모양이 눈길을 끈다. 대나무 칼로 떡의 한가운데를 눌러서 모양을 만든다. 누에가 길(吉)하다고 해서 그런 모양이라는 얘기가 있고, 조롱 모양의 떡으로 악귀를 물리친다는 말도 있

지만, 아무래도 개성의 고려 유민들이 망국의 한에 사무쳐 이성계의 목을 조르는 상상을 하며 만들었다는 설이 가장 흥미진진하다.

일본의 설날에도 떡국(오조니)은 있다. 다만 평상시에도 떡국을 즐겨 먹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사람들은 설날이 아니면 잘 먹지 않는다고 하며, 찹쌀로 만들어 길게 늘어지는 떡을 간장으로 맛을 낸 국물에 넣어 오세치 요리(일본 전통 설날 음식)와 함께 먹는다. 토란을 비롯한 채소도 많이 들어가고, 지역에 따라서 생선과 닭고기 등 부재료도 많다. 이렇듯 떡국의 모양새는 약간 달라도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의미는 우리와 같다고 하니 그럴 때 보면 또 비슷한 점이 많은 한국과 일본의 음식문화다. 서로의 차이점은 그저 인정하면 될 일이다. 가끔 ‘양두구육 비빔밥’ 같은 걸로 얹힌 시비를 걸어 빈정 상하게 하는 일만 없으면 정말 좋겠다.



피해보상 전담기구 마련됐으면...



송동선 위원(부산중재부, 전 국제신문 논설위원)

우리는 지금 좋은 싫든 매스미디어가 전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 정보는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도 있고, 전혀 무관한 것도 있다. 물론 그 정보는 유익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더러는 해악적인 것도 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의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주기도 한다.

언론이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에만 그치지 않고 비판과 고발을 한다는 점일 것이다. 부패는 대개 권력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음지에서 기생하게 마련이다. 이를 감시하고 찾아내 고발하는 것은 언론이 적격인 것이다. 그래서 언론은 자유로워야 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만 한다.

권력에게 있어 언론은 참으로 성가신 존재다. 그래서 군사독재 치하에서 언론은 강제되었다. 지난 80년 언론을 통제함해 1도 1지(一道一紙)로 통제된 사건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총칼 앞에서 언론은 눈과 귀를 막았고, 입을 단았다. 그리하여 5·18 광주민주항쟁의 참 뜻은 묻히었으며, ‘폭도의 난동’으로 왜곡되었던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고 있는 지금은 정작 그 언론의 폐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오히려 언론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언론이 작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해악이다. 로맹 롤랑(Romain Rolland)의 말마따나 독자(또는 시청자)의 심중팔구가 거짓말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은 “세 개의 적의(敵意)를 가진 신문은 천개의 총칼보다 무섭다”고 했다. 악의를 가진 언론에 대해서는 당해낼 장사가 없고, 왜곡에 대한 폐해가 그만큼 크다는 말일 것이다. 특히 최근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글들은 목숨까지도 앓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은 폐해를 줄이고, 피해를 본 당사자들을 손쉽게 구제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기구가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닌가 한다. 언론으로부터 비롯된 피해사건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이 주요 임무일 것이다. 필자는 언론계 대표 격으로 추천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높은 학식도, 넓은 식견도 없는 터여서 원만히 임무를 다할 수 있을지 늘 걱정이 앞설 뿐이다.

요즘엔 시청자나 독자들이 조그만 피해라도 그냥 넘어가려 하지 않는 경향이다. 조정이나 중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손배소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비용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구제를 받게 하기 위해 중재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만족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피신청인의 입장인 언론사측에서 보면 언론 출신인 필자를 우군(友軍)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 그러나 신청인의 처지에서 보면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감출 수 없다. 언론에 의해 인격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도 없을 터.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는 중재위에 왔을 것이다.

조정안은 대부분 정정보도나 반론문 게재, 그리고 손해배상액 결정 등으로 정해진다. 정정보도와 반론문 게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언론의 속성상 온전한 피해 구제가 될 수는 없고, 그 어떤 보상금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완전한 방편은 아니다. 그래서 가급적 신청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신청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효과적인 조정안을 도출해내는 기술이 아닐까 여기고 있다.

한편으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는 그렇다 쳐도 엄청 높게 제시한 배상액 앞에서 가슴이 철렁한다. 더러는 당해 언론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언론사의 경우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간혹 그 비용을 취재기자가 떠맡는 경우도 있는 줄 안다. 이에 따라 취재에 크게 위축받고 있는 후배들을 보면 안쓰럽기 그지없다.

해서 알권리를 신장하면서 취재가 위축받지 않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른바 ‘피해보상기금’과 같은 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다. 언론사가 일정액의 분담금을 내고, 이를 관리하는 기구가 피해보상을 전담하는 것은 어떨지...

밥상머리



심영진(정책연구팀장)

연일 한파가 몰아치니 어릴 적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던 김치국밥 생각이 난다. 멸치를 우려낸 국물에 김장김치 서걱서걱 썰어 넣고, 남은 찬밥을 넣어 뜨끈뜨끈하게 끓여 주셨던 그 김치국밥이. 한참 후에야 알게 된 것은 아주 맛있게 먹었던 그 김치국밥이 어렸던 시절에 적은 양으로 많은 식구의 허기를 채웠던 구황 음식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다.

어릴 적 우리 집은 식사시간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모두 같이 앉아 밥을 먹어야 했다. 고만고만한 다섯 형제에 시골에서 유학 온 사촌 오빠들까지 함께 지내다 보니, 가끔은 티격태격 다투다 아버지께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그런데 혼났다고 토라져 밥 안 먹는다 했다가는 더 크게 혼이 나고 눈물을 쏙 빼야 했기에 울다가도 밥 때만 되면 어김없이 아무 일 없는 듯 밥상머리에 앉아야 했다. 어렵게 살았던 부모님 세대의 신조 같은 것이었을까, 그 덕분에 나는 혼 난 뒤 밥 먹으러 가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씁스럽긴 했겠지만 배 부르고 맛있게 먹고 나면 아버지께 혼났던 설움이 이내 사그라지기도 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어머니께서 정성으로 차려주신 밥상은 나이가 들어 출가한 후에도 늘 그리운 법이며,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면 더 간절해진다.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친정어머니의 잔치국수가 그렇게 생각날 수가 없었고, 결국 부산에서 먼 길 달려오신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특유의 삶은 부추나물까지 곁들여 올린 그 국수를 먹고서야 겨우 입덧을 진정시킬 수 있었던 기억이 난다.

생각해 보면, 어머니 손맛으로 해 주신 음식은 내 마음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고향과 같으며, 힘들어 지칠 땐 새 힘을 얻게도 해주는 그런 마술과도 같다 싶다. 그리고 집 밥은 식당 밥에서는 찾을 수 없는 온기와 냄새가 있으니, 그건 바로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지 싶다.

새해 들어 한 신문사가 새로운 신세대로 일컬어지는 G세대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 결과가 흥미로웠다. 1988년 올림픽을 전후해 태어나 글로벌 시대를 자란 이른바 G세대. 이제 갓 스물을 넘긴 그들이 꿈는 성공적인 인생이란 “조직에서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1.8%)”이나 “정의를 이루고 신념을 실천한

사람(7.3%)”이 아닌 “큰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며 가족과 화목하게 사는 사람(51.5%)”이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으레 회사 일로 늦기 일쑤며,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가족의 행복 정도는 뒤로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던 것이 바로 얼마 전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 같은데.

개성과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G세대가 추구하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은 아마도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 이전 세대의 그것과는 그 좌표가 약간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IT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를 사는 글로벌 세대가 가정과 가족을 우월한 가치로 두고 있다는 점은 도회지 빌딩 숲속에서 울창한 휴양림을 보는 것 같은 감흥이 생기게 한다.

신입직원 시절에 상사를 따라 덕수초등학교 뒤편 좁은 골목길을 지나 옛날 가정집 한쪽 벽을 터서 만든 듯한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다니곤 했는데, 그 집 주인 모녀가 직접 끓여내는 우거지 된장국 맛이 예사롭지가 않았고, 서비스로 나왔던 갈치조림에 곁든 민물새우를 오돌오돌 씹는 맛 또한 일품이었다. 밥 먹는 동안 주방 한편에는 연신 누룽지가 끓고 있었고, ‘이모’, ‘고모’를 부를 때마다 주인은 얼굴 크기만 한 국자로 반 국자씩 누룽지를 떠 주었다. 그 집은 정말 이모네 가서 밥 먹고 오는 것 같은 풍경과 맛이 있었다. 소문난 식당, 외식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겐 맛도 맞지만, 그저 밥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온정과 행복을 전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의 여러 나눔과 봉사의 현장 중에 ‘밥파’ 봉사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배고픔으로 사랑에도 주린 이들을 따뜻하게 돌아보는 것이 아닐까 한다.

곧 설이다. 큰 애가 좋아하는 어죽에 막내가 좋아하는 식혜까지 일일이 챙기시며 정성으로 준비하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밀리는 귀향길을 결코 성가시다 할 수 없다. 온가족 한상에 모여 앉아 모처럼 어릴 적 그 시절로 돌아가 보자.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나누듯 가없는 그 사랑도 그렇게 간직하고 싶다. 

포털 Q&A에

언론중재위원회

가?

권오근(홍보팀장)

언론 분쟁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 법무상담팀을 통해 이뤄지는 상담 건은 매년 3,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상담의뢰자들이 최초로 중재위원회를 알게 된 경로를 알아보고 일반 국민들의 중재위원회 이용률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2개월간 이들을 대상으로 인지경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57.1% (372/651)가 TV광고를 비롯한 매체홍보가 아닌 포털의 검색 또는 포털 등 인터넷보도를 통해 중재위원회를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재위원회는 포털의 검색 기능이 위원회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첫 문턱이라고 판단하고, 위원회가 포털 사이트 상의 검색 기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네티즌에게 언론중재법은 물론 위원회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상담을 통해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해 12월 하순부터 네이버, 다음, 네이버, 야후 등 국내 대표적 포털사들과 이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우선 네이버의 경우를 보자. 포털을 통해 중재위원회를 알게 되었다는 사람들 중 '네이버의 검색 또는 보도를 통해서'가 96%(355/371)를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지식IN' 서비스에 중재위원회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네이버 또한 중재위원회와의 제휴를 통해 네티즌에게 유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상호 협약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향후 중재위원회는 네이버의 '지식IN' 서비스에서 서울지방법원 호사회와 더불어 법률 상담 제휴기관으로 상시 홍보가 되고 지식 분야 중 '언론분쟁'이라는 특화된 디렉토리가 신설돼 그 분야의 전담 상담기관으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또한 다음의 경우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이뤄지는 Q&A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연계돼 있고, 다음 아

고라의 시스템상 우리 위원회가 특정 분야를 한정해 상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중재위원회를 민원처리 주요 공공기관으로 등록, 중재위원회가 상담을 통해 언론분쟁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위원회 이용절차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렇게 될 때 국민권익위는 중재위원회의 역할을 적극 홍보해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와 협의 중에 있다.

또 네이트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네이버 '지식IN' 서비스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더 다양한 내용으로 참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이트 Q&A의 하위 메뉴인 '시사, 사회, 공공' 분야에 중재위원회 카테고리 구성 및 콘텐츠를 수록하고 메뉴 상단에 중재위원회 불박이 배너를 달아서 수록된 내용의 신뢰성을 강조하도록 한다. 또 Q&A 게시물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자명을 '언론중재위원회'로 하면서 답변 게시물 하단에 중재위원회 배너를 달도록 하고, 네이트 메인 페이지의 중하단 '시선집중' 코너에 관련 콘텐츠를 노출(노출이 가능한 Q&A 등록시 활용, 비정기적)하며, 롤링 배너를 통한 콘텐츠 홍보, Q&A 제휴 기관으로 등록 및 고정 노출을 통한 중재위원회 홍보 등과 같은 상담 및 홍보 방안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한 야후의 경우는 현재 '지식 Q&A' 시스템에 대한 자체 구조 변경이 계획 중에 있어 실질적 논의가 어려운 시점이나 언론분쟁에 대한 지식 스폰서(지식 서포터)로서 위원회가 특정 영역의 상담을 전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중재위원회와 포털사간의 이러한 협약이 많은 네티즌에게 언론 조정 중재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게 하고, 그들의 권익 실현에 조력자로서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아바타



이성민/뉴스코리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가 외화로선 전인미답의 '1000만 관객' 동원에 도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모은 영화는 역대 흥행 1위인 <괴물>(1300만 명)을 비롯해 5편으로, 모두 한국영화다. 특히 <아바타>는 3D(입체) 영화의 흥행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영화산업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 <아바타>와 3D영화 = 3D 영화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할리우드에선 이미 1952년 최초의 3D 영화가 나왔다. <브와나 악마>란 제목의 이 영화는 특수 안경을 쓴 관객 앞에 사자가 튀어나와 공격하거나, 창이 머리 위로 날아오는 효과를 선보였다. 그러나 당시의 3D 효과는 영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대신, 단순한 볼거리를 제시하는데 그쳤다. 이후 3D 영화는 놀이 공원의 특수 극장에서만 명맥을 유지했다.

잊혀졌던 3D 영화가 부활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였다. 2006년 <앤티 불리>, <몬스터 하우스> 등의 애니메이션이 완전 3D를 선보였다. <아바타>가 개봉한 지난해는 3D 영화의 원년이라 할만하다. <아바타> 이전 <몬스터 VS 에이리언>, <업> 등 10여편의 3D 영화가 개봉했다.

<아바타>는 지금까지 일부 영화팬 사이에서만 호응받던 3D 영화를 대중의 가시권에 들게 했다. 3D 상영은 2D 보다 5000~8000원 비쌌는데 불구하고, <아바타>의 3D 상영은 압표가 나돌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아바타>의 3D 효과가 사랑받은 것은, 역으로 3D를 두드러지게 내세우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할리우드의 테크놀로지 장인 로버트 저맥키스는 <베오울프>, <크리스마스 캐롤> 등 3D 영화를 꾸준히 만들어왔지만, 이들 영화에선 3D 기술

을 강조하는 듯한 장면이 반드시 등장한다. 19세기 런던의 상공을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의 중반부 한 장면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개봉한 3D 공포영화 <블러디 발렌타인>도 살인마가 내리찍는 곡괭이가 관객의 머리 위로 날아오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저맥키스와 <블러디 발렌타인>은 모두 50여년전 <브와나 악마>처럼, '신기한 볼거리'로서의 3D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아바타>엔 이렇게 '튀는' 장면이 없다. 3D 영화 <아바타>에서 방점이 찍힌 곳은 '3D'가 아니라 '영화'다. 가상의 행성 판도라에 묻힌 광물을 둘러싸고 인간과 원주민 '나비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아바타>의 상영시간은 2시간 42분.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대중이 지루해하지 않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이야기 전개를 보인다. 소재와 주제가 진부하다는 일부 비판은 관객의 호응에 묻혀 들리지 않게 됐다. 전세계 흥행 수익에서도 <아바타>는 역대 2위에 올라 순항중이다. 1위는 카메론 감독 자신의 <타이타닉>이다.

◇ 한국의 3D 영화 = 현재 전국의 스크린 수는 2000여개. 이 중 3D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곳은 170여개다. <아바타>의 흥행에 고무된 극장가는 3D 상영관의 수를 차츰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상업영화 감독들도 차츰 3D 영화의 가능성에 눈을 돌리고 있다. 광경택 감독은 2차 연평해전을 다룬 <아름다운 우리>를 3D로 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형 재난영화 <해운대>로 한국 기술진의 실력을 입증한 윤제균 감독 역시 차기작 <제7광구>를 3D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3D 영화 교육센터를 구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3D 전문 인력 7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영화계의 대응이 할리우드의 3D 산업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바타>의 제작비는 역대 최고인 4억 달러(한화 약 4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아바타>와 비슷한 시기 개봉한 <전우치>는 한국영화로선 대작 수준인 12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됐지만, 이 돈으로 <아바타> 5분 분량도 못 만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초기 투자 비용과 기술진의 역량 면에서 한국영화가 할리우드의 3D 산업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

조정, 중재

지난 호 까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명, 즉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청구들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절차는 크게 조정과 중재로 나뉩니다. 이 중 조정이라 함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와 언론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중재위원회가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개입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보도를 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보도일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중재위원회의 각 중재부는 양쪽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객관적 입장에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분쟁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하여 조정합의서에 서명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같은 조정절차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재절차는 조금 다릅니다. 중재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와 언론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조정절차와 달리, 중재는 마치 법원의 재판과도 같이 중재부의 중재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법원이 아닌 중재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으려면 당사자들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당사자간의 분쟁을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우선 있어야 하고,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중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달에 들어온 책



인터넷과 한국의 민주주의

조석장 지음 | 한국학술정보원 | 428페이지



이 책은 지난 2004년 인터넷 정치 연구개론서 격인 “한국의 e-폴리틱스: 인터넷이 정치를 바꾼다”를 발간한 이후에 인터넷 정치현상을 좀 더 천착(穿鑿)해 세상에 내놓는 두 번째 인터넷 정치 연구서로 저자는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한국 인터넷 정치의 이론과 실재를 일별해 보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 정당 출입 등 기자 경험과 각종 문헌정보 등을 분석해 한국의 민주주의 전반을 다룬 저자는, “인터넷이 시민들의 정치참여나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일정 정도 참여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성과를 거뒀다고 보면서도 정당 정치의 약화를 초래하는 등 대의 민주주의의 기능을 약화·축소시켰다”면서 그 대안 모델로 이른바 ‘시민참여 책임정치 거버넌스(governance)’를 제시한다. “전통적인 통치(government)가 위계적·배타적 통치를 의미한다면 거버넌스는 분권화와 수평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분담과 협력의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지은이 소개〉 조석장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언론인으로서 청와대, 정당 출입 등 정치부 기자로 다년간 활동했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국제부장을 거쳐 현재 사회부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과 표현의 자유(2008-2009)

한인섭 외 지음 | 경인문화사 | 294페이지



이 책은 2008년 12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 법센터에서 개최한 <2008 한국과 표현의 자유> 학술대회의 주제논문집이다. 당시에는 촛불시위와 관련된 각종 표현들이 경찰단속 및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고, 인터넷에 대한 규제 여부 논란이 일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쟁점이 다각도로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 2008년 한국

에서 표현의 자유는 입법, 행정, 사법은 물론 시민사회, 언론 전체에 중심적 주제가 되어 있었다.

수록논문은 △ 2008년 현재, 표현의 자유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근본적 문제들 (한상희/건국대) △ 촛불시위를 둘러싼 각종 표현과 규제를 보는 시각 (한인섭/서울대) △ 2차 불매운동의 합법성 (박경신/고려대)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비판한다 (조국/서울대) △ 현행 집시법의 위헌성 관련 쟁점 (오동석/아주대) △ 인터넷 실명제의 의무화, 그 위헌성 분석 (황성기/한양대) △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심사기준의 검토 (전종익/서울대) △ 공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연예인의 경우를 중심으로(김태수/서울대BK21연구원)이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법학적으로 점검하면서, 표현의 자유의 확장과 그 남용방지라는 방향성을 진지하게 담아내고 있다.

〈정책연구팀〉

“우리는 스폰지다!”

—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를 가다

현행 언론중재법 제6조에 의하면 각 언론사는 사내에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 언론의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잘못된 내용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드시 이와 같은 법률 조항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날로 높아지는 수용자 권리의식에 따라 언론사들은 자체적인 심의와 독자 불만 처리 등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그 현장을 찾아가 본다. <편집자 주>



▲ 독자서비스센터에 대해 설명하는 권태우 센터장(오른쪽)과 김정형 차장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에는 약 30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생각보다 큰 규모다. 칸막이 책상에 앉아 계속 걸려오는 독자들의 전화를 받기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보니 통신업체의 고객상담실이 연상되기도 한다.

“기사와 관련된 독자의 전화는 저희 서비스센터에서 모두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도 독자들의 전화를 편집부에서 직접 받았는데, 그러다보니 제대로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고, 때로는 뜻하지 않는 충돌도 생기더군요. 저희가 모든 불만 사항이나 의견을 1차적으로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해명,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다보니 독자들의 의견도 더 잘 수렴할 수 있고, 기자들도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권태우 센터장은 독자서비스센터가 신문사와 독자간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의견접수 및 전달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선일보 관련 조정 중재건도 가장 먼저 독자서비스센터의 손을 거쳐 각 부서 및 편집인에 전달되고, 소송 건도 마찬가지로. 또한 신문의 독자면도 서비스센터에서 발행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한 부서에서 독자의 불만처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언론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장점이라고 권 센터장은 설명했다.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독특한 점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자권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자권익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외부인의 시각에서 본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한다. 2002년에 발족해 2년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권익위원회는 현재 5기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위원들의 활동이 매우 의욕적이어서 기자들도 권익위 견해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고.

권익위에는 독자들이 직접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신청할 수 있는 통로도 열려 있다. 중재위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지만, 소송이나 중재위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겠다.



▲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모습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는 그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꾸준하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직원들의 사명의식도 높아 보였다.

“꾸준한 활동이 저희 독자서비스센터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앞으로도 유명무실화 되는 일 없이 독자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직원들에게 ‘우리는 스폰지다!’ 라고 강조하곤 합니다. 모든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죠”(독자서비스센터 김정형 차장)

언론중재위원회 2010년 시무식

권성 위원장, “ADR 기구간 협력 구체적 계기 마련해야”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4일 시무식을 열고 2010년 업무를 시작했다. 권성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는 우리 위원회가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올해에도 위원회의 기본 사명인 언론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중재위원회가 ADR 기구간의 연대를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올해에는 이를 더 발전시켜 국내외 ADR 기구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를 마련하자”고 역설했다.

2010년 위원회 업무목표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발전적 변화 모색”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업무목표를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발전적 변화 모색”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를 ①피해구제 보도의 위치, 크기 격상 ②ADR에 관한 통일절차법 법제화 작업 및 국제교류를 위한 자료 준비 ③위원회 운영재원 안정화 방안 강구로 선정했다.

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월 1일 발족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2일 예정)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기사를 심의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2월 1일 발족한다. 선거 30일후까지 150일간 운영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 학계, 대한변협, 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차 운영위원회

언론조정중재규칙,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는 2010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가 26일 10시 30분 중재위 심리실에서 개최된다.

《언론조정실무가이드》 발간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인해 달라진 사항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조정실무상의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언론조정실무가이드》가 12월 18일자로 발간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언론중재위원회 심영진 정책연구팀장이 12월 31일 언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기자와 변호사가 함께 쓴 초상권 이야기》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변호사(조사팀장)가 MBC 류종현 기자와 함께 지은 《기자와 변호사가 함께 쓴 초상권 이야기》가 발간됐다. 초상권 관련 분쟁 사례를 소개하며 법적 대처방법 등을 알려주는 이 책은 일선에서 일하는 기자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초상권 관련 문제에 대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 1,573건, 중재 111건 접수 처리

● 조정 · 중재신청 처리현황

위원회는 2009년 한 해 동안 모두 1,573건의 조정사건을 접수 · 처리했다. 이는 위원회 사상 최다 접수 건수로, 전년(954건) 대비 64.9% 증가한 것이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541건, 조정결정 96건(동의 57건, 이의 34건, 계속 5건), 조정불성립결정 88건, 기각 257건, 각하 10건, 취하 571건, 계류 10건이며, 피해구제율은 74.7%를 나타냈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신문이 6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 459건, 인터넷신문 233건, 인터넷뉴스서비스 181건, 잡지 27건, 뉴스통신 38건, 기타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재신청은 모두 111건을 접수하여 65건의 중재결정과 46건의 중재화해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권별로는 정정청구가 61건, 반론청구 25건, 추후청구 7건, 손해청구 18건이었다. 전년도 중재신청 사건이 모두 10건이었음을 감안하면 비약적인 증가라고 볼 수 있다.

조정 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별	청구명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계속						
1~12월	정정	691	288	40	18	3	50	15	2	269(181)	6	76.5
	반론	142	67	2	4	1	3	10	1	52(36)	2	82.0
	추후	41	13				2		1	25(24)		92.5
	손배	699	173	15	12	1	33	232	6	225(125)	2	68.3
합계		1,573	541	57	34	5	88	257	10	571(366)	10	74.7

중재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별	청구명	청구 건수	처리결과	
			중재 결정	중재 화해 결정
1~12월	정정	61	30	31
	반론	25	20	5
	추후	7	3	4
	손배	18	12	6
계		111	65	46

●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09년 한 해 동안 자체심의 218건, 시정권고 신청 심의 35건(8월 7일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라 중단) 등 총 253건의 법익침해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매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신문 132건, 일간지 56건, 방송 29건, 뉴스통신 20건, 주간지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일간지에 대한 시정권고건수는 감소한 반면,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다소 증가했다. 침해유형은 피의자 신원공개(97건), 자살자 신원공개(93건)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상담 현황

위원회는 2009년 한 해 동안 3,014건을 상담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2,3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적절차 안내가 139건, ▲재상담 예정 48건, ▲타기관 안내가 267건, ▲자체종결 56건, ▲기타 안내가 275건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을 살펴보면 일간신문 820건, 주간신문 284건, 방송 888건, 뉴스통신 72건, 인터넷 신문 488건, 인터넷뉴스서비스 519건 순으로 나타났다.

● 교육 현황

위원회는 2009년 한해 동안 총 127차례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대상기관별로 보면 지자체 45회, 언론사 33회, 대학 28회, 공 · 사기업 17회, 기타 4회 등이다.



새해맞이 산행

권성 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제6중재부 위원 및 조사관들과 함께 청계산에서 새해맞이 산행을 했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공헌협약식 체결

대구지방변호사협회 회장 **장익현 위원**(대구중재부, 사진오른쪽)은 지난 15일 사회공헌활동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도충구)와 사회공헌협약식을 체결했다.



“2010년 연세언론인상” 수상자 선정

여경택 위원(서울제5중재부, 前 동아일보 편집국장)은 지난 11일 연세대 출신 언론인들의 모임인 연세언론인회가 제정한 2010년 연세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2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디어공공성포럼 상임대표에 선임

차재영 위원(대전중재부, 충남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지난 9일 열린 미디어공공성포럼 정기총회에서 공동대표에 선임되었다.

동아일보 등 칼럼 필진으로 선정

새해를 맞아 중재위원들이 주요 언론사의 칼럼 필진으로 대거 선정되었다. **박성희 위원**(서울제1중재부,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은 동아일보 고정 칼럼 ‘동아광장’의 새 필진으로 선정되었다. **김정탁 위원**(서울제3중재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형기 위원**(충북중재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은 서울신문의 ‘열린세상’, **박동숙 위원**(서울제5중재부,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은 같은 신문 ‘옴부즈맨 칼럼’의 필진을 각각 맡게 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 안내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포털, 언론사 닷컴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등

■ 신청절차

① 신청기간

조정·중재의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②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지방자치단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방법

- 신청서를 직접 작성 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신청서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것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메일,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등 전자문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 02)397-3000, 3010, 3100

e-mail counsel@pac.or.kr

홈페이지 www.pac.or.kr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100-750)

